

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행정 틀 짜기 본격

통합제정 512건·폐지 179건...오늘부터 순차적 의견 수렴 출범 맞춰 공백 최소화...기준 조정 필요 사항 단계적 정비

광주와 전남도가 오는 7월1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와 전남도는 오늘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시도는 입법예고 이후 폐지안, 조례·규칙 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통합특별시 출범일에 맞춰 자치법규가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대상은 출범일 우선 정비 대상 자치법규다. 두 시·도의 현행 자치법규 중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특별

시 자치법규로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한다. 시·도는 앞서 지난 6일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심의를 열고,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사항을 검토해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폐지·단계적 정비 대상으로 구분했다. 통합 제정안에는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자치법규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민 행정서비스 관련 자치법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정명 수수료 등이다.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등 광주·전남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자치법규와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안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춰 정비한다. 폐지 대상은 통합 자치법규로 대체되거나, 상위법령이나 지침으로 운영 가능한 경우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법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특히 농어민공익수당,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통합 이후 기준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지원 기준,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새로운 통합 조례·규칙 제정 전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 등 경과규정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해 계속 적용한다. 또한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도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기준과 절차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합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되는 자치법규도 기존 행정서비스와 대민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전은옥 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조례의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

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효서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제45회 스승의날 기념식.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광주교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제45회 스승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기획처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요청 박창환 심의관 초청 간담회서 안좌솔라시티 성과·애로 공유

전남도는 12일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이 신안 안좌솔라시티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전남지역 주요 국·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남의 핵심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와 공유하는 자리였다.

전남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박창환 심의관은 이날 신안 안좌솔라시티 태양광발전소에서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성과를 전수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 저장장치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의 확산 가능성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살폈다.

안좌솔라시티 태양광발전소는 유유 염해농지를 활용해 조성한 대규모 태양광 단지다. 지역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와 공유하는 대표적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발전 수익이 지역상품권 등으로 환원되면서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소멸 대응, 에너지 전환, 주민소득 창출을 함께 실현하는 정

책 모델로 확산하도록 정부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해 12월 안좌솔라시티 현장을 방문해 신안 태양광 발전을 새로운 전격수요에 대응하면서 주민에게도 보탬이 되는 국가적 모델로 평가했다.

전남도는 박창환 심의관이 지역 여건과 재정 수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이 전남의 국·권사업과 산적한 현안을 중앙정부와 보다 깊이 있게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 서남권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핵심 교통망 확충과 에너지 혁신 인프라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암~광주 초고속도로와 영암~진도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과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검토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에서 확인한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가 국·권 지원의로 이어지도록 기획예산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전라광주권, 종합격차 최하위지역 비율 전국에서 가장 높아"

김문수, 민주연구원 '2026 불평등 보고서' 분석 전남 등부권, 교육·정주 여건 등 진단·보완 필요



산(27.1%)이었고, 대중교통 접근성(25.5%), 소득(19.3%), 건강(10.4%) 순이었다. 특히 보고서는 전라·광주권의 특성

에 대해 "소득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의 격차가 두드러진다"며, 건강과 일자리 격차도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 높다고 분석했다. 전남·광주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별 취약 요인도 뚜렷하게 갈렸다. 해남군·고흥군·보성군·완도군 등 남해안 군 지역은 일자리 영역이 취약했고, 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인구 영역, 고흥군·영암군은 소득 영역에서 취약성이 확인

됐다. 반면 광주 5개 구는 대체로 주거 영역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 농산어촌권은 일자리 부족·인구 감소·소득 취약 등 지역 활력 저하 문제가, 광주 도시권은 주거 여건과 정주비용 등 도시형 생활 인프라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순천·여수·광양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일자리 기반은 높지만 교육·영역 지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의 이에 대해 "인구가 적은 군 지역과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지역 간 차이, 사회교 인프라 측정 방식 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교육의 질을 단정하기보다 전남 등부권의 교육·정주 여건을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다. 광주권(광주와 전남·북) 41개 시군구 가운데 39.0%가 전국 지역종합격차지수 하위 20%에 해당했다. 이어 대구·경북권 32.3%, 충청권 25.0%, 강원·제주권 25.0%, 부울경권 18.0%, 수도권 0.0% 순이었다. 반면 전국 상위 20% 시군구 비율은 수도권권이 37.9%로 가장 높았고, 전라·광주권은 9.8%에 그쳤다. 시군구별 취약 요인도 확인됐다. 지난 2023년 전라·광주권의 영역별 격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등

배구 페퍼저축, 광주 연고 유지 무계

시, 통합특별시 출범후 재협약 전망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광주 연고지 협약이 12일 만료된 가운데 통합특별시 출범 후 연고지 협약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와 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현재 인수를 타진 중인 기업이 구단 운영 여부와 세부 조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보안 유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인수 의향 기업 측이 연고지 이전을 별도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광주 잔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수를 전제로 할 경우 광주 연고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 것

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 이전보다 광주 연고 유지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약 만료일 자체보다는 구단 인수의 여부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향후 연고지 유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 기업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협약 주체가 명확해진 상태에서 지원 조건과 운영 협력 방안 논의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새 연고지 협약 추진도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 18일 시내버스·지하철 무료 운행

시민·방문객 누구나 이용 가능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포함

광주시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오는 18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무료로 운행한다. 무료 이용 대상은 광주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와 지하철,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이며, 광주시민을 포함해 당일 광주를 찾은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면 된다. 실제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무료 운행에 따른 운송손실금 정산의 정확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카드 태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교통카드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운전원 교육, 대시민 홍보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지난해 5·18 45주년을 기념해 5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실시했던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무료 운행은 이용객수가 총 65만건에 달할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상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모든 시민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 섬 방문의 해 연계 '기부런' 흥행 돌풍

6일 만에 전국서 400명 접수...1000명 목표 40% 달성

전남도는 오는 30일 여수·남도 일일 해상교량에서 개최되는 '기부런(RUN FOR ISLAND)' 참가 신청이 접수 시작 6일 만에 400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체 모집 인원 1000명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조기 마감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참가자의 상당수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러닝 크루로, SNS를 통한 자발적 홍보와 입소문을 기반으로 전국 각지로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기부런은 단순한 마라톤 대회를 넘어 '달리며 기부하는 공익형 스포츠 이벤트'로 참가비 3만원의 50%를 섬 지역 주민복지와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는 여수·남도대교와 둔방대교를 잇는 해상교량 약 10km 구간에서 펼쳐지며,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